

환경부 차관 “정부-지자체 협력으로 전기차 보급동력 확보 및 가속화”

-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현황 등 집행상황 점검, 보조사업자 애로사항 청취
-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·지방정부 지원 노력 당부

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8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(17개 시·도)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~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(전기차 캐즘)와 화재 를 겪으며 위축되었으나 2025년도 들어 보급이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.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전환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.

【 (참고)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(단위 : 대, ※ 등록대수 기준) 】

	~'21(누적)	'22	'23	'24	'25(~7월)
계	238,063	164,486	162,605	146,902	118,705*
승용	191,755	123,920	115,817	122,675	102,107
승합	3,146	2,074	2,820	3,611	1,448
화물	43,036	38,471	43,940	20,581	15,139
기타	126	21	28	35	11

* '24년 7월 등록대수는 80,620대 → 전년동기비 약 47% 확대

이번 회의에서는 △지자체별 집행상황, △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문제, △전기승합 조기 집행방안, △지자체 결산 문제 등

그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. 또한 남은 2025년도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논의와 보조금 집행 시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.

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·차종간 보조금 재배정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보조금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차년도 보조금 지침 개편 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.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추가편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전기차 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
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“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”라며, “정부-지자체가 협력하여 보조금 집행상황을 개선하는 등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,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동력 확보 및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류필무 (044-201-6880)
		담당자	사무관	강 찬 (044-201-6882)

